

“쌀값 안정 특단 대책 절실”

김동구 도의원 대표발의 결의안 본회의서 채택... 선제적 시장격리 즉각 시행 등 건의

쌀값 대폭락으로 성년 농민들의 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021년산 재고 쌀을 전량 매입하고 수확기 이전 선제적 시장격리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동구 도의원 대표발의 결의안 본회의서 채택... 선제적 시장격리 즉각 시행 등 건의

4,740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4.8%가 폭락해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고 전국 농업 협 조합에 쌀인 쌀은 7월 말 기준 42만8,000톤으로 전년 동월(23만7,000톤) 대비 8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

계청이 발표한 2022년 벼 재배면적 조사 결과 올해 산 벼 재배면적이 크게 줄지 않은 데다 올해 벼 생육상황도 전반적으로 양호해 쌀값 하락이 반복될 게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2017년 이후 매년 35만톤 수준으로 유지해온 공공비축 쌀 매입물량을 올해는 10만 톤을 확대하여 총 45만톤을 매입하고 매입 시기도 앞당기겠다고 발표했으나, 농민들은 여전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실수가 반복될 것이라며 불안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의 21년 산 재고 쌀 전량 매입, 중생종·만생종 벼 수확에 따른 특단의 대책, 수확기 이전 선제적 시장격리 조치와 생산 과잉 시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동구 의원은 “지금 농촌에서는 수확기를 앞두고 농민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애지중지 키운 벼를 갈아엎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전국 280만 농민들의 눈물과 한숨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도의회는 채택한 결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전달해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김경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제2회 전북 편 더 나은 민주당 만들기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북, 민주당의 뿌리” 이재명 대표, 당대표 선출 이후 첫 전북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에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전북을 방문했다

이 대표는 15일 전북 방문 첫 일정으로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더 나은 민주당 만들기’를 주제로 전북지역 당원 및 도민들과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많은 전북도민과 당원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민생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국민들의 더 나은 삶만큼

중요한 것이 어딴냐”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전북은 민주당의 뿌리”라며 “전북에서의 민주당은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보는 심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북도민들은 민주당이 버릴 수 없는 천륜, 사랑하는 자식들인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당대표를 하면서 약속드린 것처럼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현장속으로 들어가 정치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옆에 곁에 있는 존재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표는 16일 전북도청에서 당 지도부와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 전북지역 국회의원, 김관영 도지사,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최고위원회 의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한 뒤 오후에는 김제시 농업인 교육문화지원센터로 이동해 최근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처한 지역 농업단체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경수 기자

“외연확장의 상징인 절 선택해 달라”

국힘 이용호 의원, 원내대표 출마 선언

국민의힘 이용호의원(남원·임실·순창)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용호 의원은 “내분과 혼란에 빠진 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으며, 당이 큰 위기를 맞이한 현 상황에서도 원내 대표 돌려막기, 추대론 등 과거 회기적인 발만만 하고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호남 출신의 자신이 원내대표가 되어 위기일수록 처절한 토론과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드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겠다”고 어필했다.

또한 그는 재선의원이 원내대표에 출마하는 것은 이르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이미 21년 전에 재

선 의원이 원내 사령탑을 맡은 바 있다”며 “국민의힘이 21년 전보다 후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용호 의원은 “호남이 지역구이며, 실용적이고 중도보수적인 이용호를 선택한다면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것이고, 국민의힘이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1년 6개월 남은 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민의힘의 변화를 원한다면 변화의 상징’ 저 이용호를 선택해달라”와 함께 “국민의 힘의 차기 총선 승리를 통한 윤석열 정부의 성공,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바라다면 ‘외연 확장의 상징’인 이용호를 선택해 달라”고 원내대표 출마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용호 의원의 출마 선언으로 주호영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대하려는 의견이 불가능하게 됐다. /김경수 기자



“노령인구 레저활동 지원 파크골프장 시설 확충 필요”

환경부 군산시의원 사례지역 답사 나서

군산시의회 환경부 의원이 관내 파크골프장 확충 수요 증가에 따라 익산시와 김제시 파크골프장 조성·운영 사례지역 답사를 통해 대안 모색에 나섰다.

군산시는 수송공원 내 파크골프장이 유일한 시설이나 너무 비좁은 공간에 조성돼 보니 변변한 대화객좌는 물론이고 동호인들의 이용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지속적인 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익산시는 만경강 목천지구에 기존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운영중에 있으며 올해부터 약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인근에 18홀 규모를 추가로 증설할 계획이며, 김제시는 청하면 일원의 만경강 동지산지구 2021년 4월부터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운영 중이며, 김제시 역시 장기적으로 인근에 추가로 18홀 규모를 증설할 계획이다.

2개 시 모두 만경강 하천부지에 대하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 점용허가를 득하여 파크골프장을 조성했으며, 하천부지의 특성상 영구시설물 설치에 대한 제약 및 하천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한 부담 등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 의원은 “노령인구의 전진한 레저활동 지원을 위하여 파크골프장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며 “군산시 관내 대이면 일원의 만경강 하천부지 등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등을 통해 사업 대상지 확보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파크골프장 설계단계에서부터 화장실 등 부대편의시설의 적정 배치와 잔디 유지관리를 위한 관수시설(스프링클러, 급수관 등)의 병행설치 등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산=김관근 기자

전북 지역안전지수 최하위... 대응은 방치 수준

문승우 도의원, 5분 발언서 “예산 투입, 상향 평준화를”



전라북도의 자세이다.

지역안전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제시는 교통 자살 2개 분야는 5년째 최하위인 5등급이며, 정읍시도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분야가 4등급 5등급에 머물고 있어 사실상 전라북도의 안전행정이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전북도는 도의회에서 지역안전지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태도만 보이며 실제 개선조치에는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와 충청도는 지역별,

분야별, 세부 지표별 상세 분석을 통해 안전 격차를 파악하고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역안전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승우 의원은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현 실태를 들여다보고 주민이 민족할 수 있는 안전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다”면서 “그러나 전라북도도는 이렇다 할 적극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재정투입마저 전년도보다 감소한 36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방치 수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지역안 안전 불균형 해소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로 지역안전지수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다양한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맞춤형 안전 프로그램 개발하여 지역안전지수를 적어도 지역별, 분야별로 상향 평준화 시켜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

도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율 전국 2위... 면허 반납률 2%에 그쳐

윤영숙 도의원, 반납 후 이동권 보장방안 마련 등 정책대안 제시



10명 중 무려 7명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인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지난 5년 간(2017~21년) 전국 17개 시·도의 고령운전자 사고율에 있어서도 전북은 전남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고, 5년 평균 교통사고 증가율을 역시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져도 전북도는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지급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유일하다. 그런데 실제 면허 반납률은 65세 이상 면허 보유자 수 대비 2%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사업 효과가 미미

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령운전자 인지기능능력 검사시스템’ 사업의 경우 프로그램 설치 등 장비구비에만 2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고 올해 4월에서야 납품 완료되어 운영주체인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에 배치됐다. 하지만 9월 현재까지도 장비운용문제, 운전기사 채용 지연 등 각종 문제로 말미암아 찾아 가는 인지기능능력검사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5억원을 들인 차량은 수개월째 그늘도 없는 주차장에 덩그러니 서 있는 상태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실효성 있는 고령운전자 관리정책 추진을 위해 과감하고 현실적인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 정책 추진 면허반납 이후 고령운전자 이동권 보장 정책 마련, 지방도 설계 시 명시성 및 시인성 개선 위해 국토부 가이드라인 적극 반영,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과 홍보 지속 등을 제안했다. /김경수 기자

전북 노인보행자 보호 ‘매우 취약’

도내 설치 노인보호구역 49소로 전국 최하위 수준

전라북도의 노인보호구역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 노인보행자 보호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시도경찰청별 전체 교통사고,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발생한 65세 이상 노인보행자 교통사고는 9,893건이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601명, 부상자는 9,4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항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 등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전국에 설치된 노인보호구역이 2900개소에 달하지만 지역별 지정현황을 보면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시설이 사고多发 지역을 중심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 또한 2021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체 194명 중 39명으로 20.1%의 비율의 적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설치된 노인보호구역은 총 49

개소로 가장 많이 설치된 충남의 682개소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준이며, 18개 시도 중 세종시(6개)를 제외한 전국 최하위(17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만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라북도에서 노인 보행자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은 시급한 과제로 보여진다.

조은희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며 어르신들의 교통안전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경우 거동이 불편하거나 느린 보행속도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어르신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나 최근 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을 조사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사고多发지역에 대한 안전시설을 확충하는데 각 지자체와 유관부처가 민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